

엘리제조약을 위하여*

- 유럽 통합과 독일-프랑스 화해의 셋길 -

이 용 재

- I. 머리말
- II. 전후의 독일-프랑스 관계와 ‘독일 문제’
- III. 유럽 공동체를 향하여
- IV. 유럽 통합과 독일-프랑스 화해 사이
- V. 엘리제조약: 다자간 교섭에서 양자간 교섭으로
- VI. 맺음말

I. 머리말

라인 강을 사이에 둔 두 이웃은 본래 형제의 나라로 출발하였으나 수백여 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온 영원한 맞수였다¹⁾ 지난 두 세기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커다란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를 “민족의 원수”처럼²⁾ 여긴 프랑스와 독일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가라앉히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 냉전 체제의 성립과 유럽 공동체의 모색이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부응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만 했다. 자국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과 동침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제 관계의 논리였다. 두 나라는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1).

1) 중세 이후의 독일-프랑스 관계사의 변천에 대해서는 김승렬·이용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활동』(동북아역사재단, 2007), “제1부-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참조하라.

2) M. Jeismann, *La Patrie de l'ennemi, la notion d'ennemi national et la représentation de la nation en Allemagne et en France de 1792 à 1918*(CNRS Editions, 1997), p. 207.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가라앉히지는 못하면서도 한걸음씩 화합의 미래로 향해 나아갔다.

독일과 프랑스가 해묵은 반목을 뒤로하고 역사적인 ‘화해(réconciliation, Versöhnung)’의 길로 접어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1963년에 맺은 ‘프랑스-독일의 우호와 협력 조약’, 즉 엘리제조약(Traité de l'Élysée)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갈등과 대립을 거듭해온 양국 관계가 엘리제조약 이후 최근 반세기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라인 강 양편의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 국민들은 이제 상대방을 ‘잠재적 적성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우호가 증진되는 데 비례해서 두 나라의 화친에서 추진력을 얻은 유럽공동체의 건설도 놀랄만한 진척을 보였다. 엘리제조약 40주년을 맞이한 2003년 1월 22일, 라인 강의 양편에서 성대한 기념제가 거행되었으며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Jacques Chirac)와 독일 수상 슈뢰더(Gerhard Schröder)는 “두 나라 사이의 화해를 봉인하고 유럽 대륙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준” 엘리제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³⁾ 양국 정상의 축사에 화답하는 듯이 프랑스인의 81%와 독일인의 86%가 독일-프랑스 우호가 유럽 건설의 견인차라고 여론 조사에 답했다.⁴⁾

요컨대 엘리제조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낳고 유럽의 통합과 번영을 앞당긴 ‘세기의 조약’으로 축성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 통합을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⁵⁾ 오늘날 두 나라는 통합 유럽 시대의 화합과 번영을 이끄는 쌍두마차로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약이 조인된 1월 22일을 ‘독일-프랑스의 날’로 기념하는 오늘날, 엘리제조약은 이미 역사의 한 장면을 넘어 신화의 영역에 들어선 듯하다. 엘리제조약이 프랑스인과 독일인에게 나아가 유럽인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억의 장소(lieu de mémoire)’로서의 영예에 얼마나 다가섰는가를 묻는 한 논평자의 글은 기념제와 축사로 장식된 엘리제조약 ‘기억 만들기’ 작

3) *Revue commémorative du 40e anniversaire du Traité de l'Élysée*,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Coopération France-Allemagne(2003), p. 2.

4) Sondage CSA-Arte-Llibération, 27 janvier 2003, cf. www.csa-tmo.fr.

5) T. Jansen, “L'importance du traité franco-allemand dans le cadre du processus d'intégration européenne”, St. Martens(dir.), *L'Allemagne et la France, une entente unique pour l'Europe*(L'Harmattan, 2004), p. 33.

업이 역사가의 비판적 분석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⁶⁾

엘리제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기념제의 휘장을 걷어내고 조약이 체결된 당시의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의 맥락 안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동·서 냉전과 유럽 통합이라는 전후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조약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위한 양국간 교섭은 통합 유럽의 건설을 향한 다국간 교섭과 어떤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는가? 엘리제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독일 ‘커플’은 통합 유럽의 ‘대가족’ 안에서 과연 어떻게 자리잡고 있었는가? 독일-프랑스 화해 조약은 곧 양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로 이어졌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관계에 집중되어 온 시야를 유럽공동체 전체의 지평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이는 곧 독일-프랑스 화해와 통합유럽 건설 사이의 관계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글은 소위 ‘프랑스-독일 커플(couple franco-allemand)’⁷⁾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된 엘리제조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통합 유럽의 건설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구명해 보려는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II. 전후의 독일-프랑스 관계와 ‘독일 문제’

독일이 패망한 직후 1945년 8월에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은 독일의 무장 해제와 연합국에 의한 분할·점령을 결정했다. 프랑스는 비록 포츠담 회담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승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영국, 미국, 소련과 함께 독일 지역을 분할·통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4개국 분할 통치는 애초부터 일관되고 효율적인 전후처리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독일 동

6) R. Frank, “Le Traité de l’Elysée: un lieu de mémoire franco-allemand?”, C. Defrance & U. Pfeil (dir.), *Le Traité de l’Elysée et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1945-1963-2003*(CNRS Editions, 2005), pp. 213-221. 한편 ‘기억의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P. Nora, *Les Lieux de mémoire*, t.I. La république (Gallimard, 1984)를 참조하라.

7) ‘프랑스-독일 커플’ 개념의 탄생과 의미 변천에 대해서는 J. Jurt, “Le couple franco-allemand, Naissance et histoire d’une métaphore”, *Cahiers d’Etudes germaniques*, no. 41(2001)을 참조하라.

부를 점령한 소련 군사령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점령지의 행정을 서로 통합하고 독일의 경제 재건과 주권 이양을 가능한 한 앞당기려 한 반면에,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독일을 영원한 패전국 상태로 묶어 놓고자 했다. 독일 강점기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프랑스의 대독일 정책은 우선 독일 제국을 해체하고 독일의 경제력을 파괴함으로써, 라인 강 저편에서 또 다시 강국이 탄생할 위험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강박관념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다.⁸⁾

친독세력에 대한 ‘숙청(épuration)’의 회오리가 몰아친 해방 프랑스에서 독일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물론 공산주의 계열이든 드골의 자유 프랑스 계열이든 항독 레지스탕스 운동의 계보를 잇는 정치 세력들이었다. 종전 직후 레지스탕스의 정통성을 다투며 정계의 양대 세력으로 부상한 공산당(PCF)과 친드골파 인민공화운동(MRP)에게 대독 강경 노선은 우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저항 프랑스의 지도자로 1945년 11월에 공화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드골은 독일이 “지난 145년 동안 프랑스를 일곱 번(1792, 1793, 1814, 1815, 1870, 1914, 1940년) 침략하고 파리를 네 번(1814, 1815, 1871, 1940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독일의 회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하곤 했다.⁹⁾

신생 제4공화정의 의회중심 체제에 반대해 1946년 초에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프랑스인민연합(RPF)을 결성하여 오랜 야당의 길에 접어든 후에도 드골은 사회당과 급진당 계열의 연립정부들이 추진하는 선부른 대독일 유화정책에 맞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해” 드골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해결책은 독일이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 즉 제국(Reich)으로 재건되는 것을 막고” 독일을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되기 이전의 “각양각색의 전통적인 게르만 국가들”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다.¹⁰⁾ 따라서 드골은 독일의 재무장과 단일

8) F.-G. Dreyfus,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H. Ménudier(dir.),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dan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Editions Complexe, 1990), p. 51.

9) “Discours radiodiffusé du 10 décembre 1945”,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Pendant la guerre 1940-1946)(Plon, 1970), p. 656.

10) “Discours prononcé à Bar-le-Duc du 28 juillet 1946”, Ch. de Gaulle, *Discours et*

국가 성립을 막는 방편으로 루르(Ruhr)에서 자르(Sarre)로 이어지는 독일의 산업요충지를 독일로부터 떼어내어 연합국들의 관할 아래 두자는 제안을 거듭 내놓았다.

루르와 자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강경한 요구는 한편으로 석탄과 철강 등 군수물자와 관련된 산업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독일의 군사력 재건을 막는 방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프랑스의 경제와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요청이기도 했다. 드골의 후원 아래 설립된 경제기획총국(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을 총괄했던 장 모네(Jean Monnet)는 붕괴 직전에 이른 프랑스 산업의 재건을 추진했다. 프랑스의 전후 경제부흥 계획 즉 ‘모네 플랜(Plan Monnet)’의 골자는 프랑스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해 독일의 루르와 자르 지방에서 공급되는 양질의 석탄과 철강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우선 프랑스 점령지 안에 위치해 있는 자르 지방을 독일에서 분리시켜 프랑스의 통치를 받는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영국 점령지에 위치해 있는 루르 지방을 라인란트 지역과 함께 묶어 프랑스의 관할 아래 둘 것을 연합국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1948년 12월, 연합국 삼자회담에서 루르 지방에서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분배를 프랑스가 참여하는 국제관리청(International Authority for Ruhr)에서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은 독일의 산업 잠재력을 와해시키는 동시에 프랑스 경제의 재건을 앞당기려는 대독일 강경책의 승리였다. 몇 년 후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더불어 일찍부터 독일-프랑스 화해의 주창자요 유럽 통합의 선봉장으로 등장할 장 모네 역시 적어도 종전 직후에는 독일인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대독일 강경책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¹¹⁾ 적어도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후 프랑스의 경제 재건과 강국으로의 부상은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약소국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40년대 말 동·서 냉전 시대의 개막은 독일-프랑스 관계를 포함한 유럽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1947년 초에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 공산권의 확산 저지와 서유럽에 대한 경제

messages, t.II(Dans l'attente 1946-1958)(Plon, 1970), pp. 13-14.

11) W. Gruner, "La place de l'Allemagne dans l'Europe d'après-guerre selon Jean Monnet(1943-1950)", G. Bossuat & A. Wilkens(dir.), *Jean Monnet, l'Europe et les chemins de la Paix*(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99), p. 124.

원조계획을 내놓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정책으로 맞섰다. 1949년 4월에 미국의 주도 아래 서유럽 10개국이 참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탄생하고 냉전 구도가 유럽에 완전히 자리잡게 되자 공산진영과 서방진영으로 분할 점령되어 있는 독일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은 서유럽의 부흥과 단합을 추진했으나 문제의 관건은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잠재력으로 볼 때 바로 독일의 재건에 있었다. 독일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서방의 요새(bastion de l'Occident)”¹²⁾ 역할을 떠맡아야 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미래의 동맹국 독일의 재건을 위해 원조를 아끼지 않는 한편 인접국들 특히 프랑스에게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독일 강점기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니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소위 ‘독일 문제(question allemande)’는 종종 미·영·프 연합 3개국 사이의 불화의 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¹³⁾

1949년 봄에 소련이 원폭실험에 성공하고 중국에서 공산 정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짙어지자 유럽에서도 공산주의의 위협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프랑스로서도 더 이상 대독일 강경책만을 고집할 수 없었으며, 루르 지방에 대한 타협안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얻어낸 대신에, 그해 5월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분리해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탄생시킨 국제적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반소 군사동맹의 축으로 서독의 군사 재무장과 경제 재건을 추진했으며, 더 나아가 서독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블록에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NATO가 출범한 1949년 4월에 워싱턴에서 회동한 서방 3개국 대표가 “독일인들을 유럽 결사체(association)에 가능한 한 긴밀하게 통합시킨다”라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¹⁴⁾ 같은 해 10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에게 독일 문제의 해결은 독일의 태도만큼이나 서방 점령국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단언하면서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고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서유럽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지도

12) J. Binoche, *Histoire d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 1789 à nos jours* (Armand Colin, 1996), p. 235.

13) P. Guillen, *La Question allemande 1945 à nos jours*(Imprimerie Nationale Editions, 1996), pp. 35-36.

14) H. Ménudier, “La rupture Est-Ouest et ses conséquence pour l'Allemagne”, H. Ménudier(ed.), *L'Allemagne occupée, 1945-1949*(Editions Complexe, 1990), p. 59.

력을 발휘할 때"라고 촉구했다.¹⁵⁾ 이러한 미국의 복안에 대한 프랑스의 현실적인 대응책은 독일의 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 유럽이라는 새로운 정치 공간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독일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소 냉전 체제 아래서 프랑스의 대독 정책 역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III. 유럽 공동체를 향하여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독일-프랑스 관계

두 차례에 걸친 전란의 폐허를 디디고 선 유럽은 상쟁과 공멸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유럽통합 논의를 다시 끄집어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짙은 해빙 무드가 감돌던 1920년대에 싹튼 유럽통합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두 번째 황금기”¹⁶⁾를 맞았다. 1948년 5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대회’에는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사회운동가 등 무려 800여 명에 달하는 국제적 명망가들이 모여 통합 열기를 북돋았다. 유럽의 화해와 공존을 염원하는 여론에 힘입어 국내외의 통합운동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통합 청사진을 내놓고 각국 정부와 공식·비공식적으로 교섭을 벌였다.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여전히 논란거리였지만 전란에 지친 유럽인들에게 유럽 통합은 물리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유럽 통합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덕적 대의명분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전후의 재건과 냉전에 유럽 각국이 자국의 경제 부흥과 군사 방위를 도모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할 냉철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도 했다. 유럽의 평화와 공영을 외치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적 동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¹⁷⁾

15) *Ibid.* p. 61.

16) F. Robert, “La construction de l’Europe: une histoire cyclique”, *Questions internationales*, no. 7(mai-juin 2004), p. 8.

17) 대표적인 유럽통합사 연구자인 Milward는 유럽통합이란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유럽적 이상주의의 결실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유럽 국민국가들의 이해타산의 산물이며 유럽통합에 의해서 국민국가들의 기능과 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A. Milwar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2*(London: Routledge,

통합 유럽으로 향한 획기적인 첫걸음을 뗀 것은 프랑스였다. 좌익 공산당과 우익 드골파 프랑스인민연합(RPF)이라는 두 거대 정당의 공세에 시달리던 중도파 연립 정부는 유럽 통합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고자 했다. 1948년 12월, 프랑스의 요구에 따라 루르 지방에서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을 연합국의 공동 관리 아래 두게 되자, 독일에서는 반프랑스 여론이 들끓었으며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서독 수상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1950년 3월에 통합 유럽을 향한 준비 단계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을 먼저 내놓음으로써 루르 문제를 두고 프랑스를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루르 분쟁을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일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유럽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은 경제기획청장 장 모네가 입안한 소위 ‘슈만 선언’을 발표하고 유럽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1951년 4월에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모두 6개국 이 참가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6개국 유럽’이 탄생한 것이다. ECSC는 비록 6개국만 참가한 ‘작은 유럽’이었지만 개별 가입국가들의 간섭에서 벗어난 초국가적 주권기구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즉 6개국 유럽은 석탄과 철강의 생산에 관련된 주권을 독립적 결정 기구인 고등관리청(Haute Autorité)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고등관리청의 초대 의장을 맡은 장 모네를 비롯한 유럽주의자들이 꿈꾸던 ‘유럽합중국(Etats-Unis d’Europe)’의 이상이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실현되는 듯이 보였다.

슈만 플랜은 철강이나 석탄과 같은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그 역사적인 의미는 또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있었다. “유럽 국가들의 결집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수백 년 묶은 적대관계의 해소를 요구한다. 이제 도모하는

1984);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State*(London: Routledge, 1992), 한편 Milward의 논지에 입각하여 초기 유럽통합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의 기원과 의미”, 『프랑스사연구』, 제6호(2002년 2월).

작업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슈만 선언의 요지였다.¹⁸⁾ 서독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면서 독일의 정치적·군사적 재기 가능성을 우려한 프랑스는 군수 산업에 필요한 원료들을 공동 관리에 두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과의 화해를 위한 정치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슈만 플랜은 서독으로서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제안이었다. 아데나워 수상은 “지난 25년 동안 나 자신이 제안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며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¹⁹⁾ 패전국으로서 연합 3개국에 의해 주권 행사를 제약받은 서독으로서도 국제무대에서 승전국 프랑스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서유럽의 틀을 벗어나서 소련과 동맹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머리를 맞댄 ECSC는 프랑스-독일 커플의 탄생을 알리는 작은 공연장 구실을 한 것이다.²⁰⁾

(2) 유럽방위공동체와 독일-프랑스 관계

ECSC의 탄생이 프랑스-독일의 관계개선을 향한 진일보였음은 물론이지만 라인 강 양편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긴장이 완화되기에는 독일의 재무장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이어서 동·서독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1950년 6월에 소련의 후원을 얻은 북한군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인들은 동독이 서독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유럽에서 소련과 군사적으로 대치할 경우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미국은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9월, 미국은 NATO의 틀 안에서 서독의 재무장을 서유럽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서독으로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무장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넘기지 받기는 입장이었다.

18) “Déclaration de Robert Schuman, minist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P. Gerbet, F. de la Serre & G. Nafilyan, *L'Union politique de l'Europe, jalons et textes*(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p. 58.

19) P. Gerbet, “La genèse du Plan Schuman, des origines à la déclaration du 9 mai 195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6, no. 3(1956), p. 539.

20) J.-M. Guieu, Ch. Le Dréau, J. Rafflik & L. Warlouzet, *Penser et construire l'Europe au XX^e siècle*(Belin, 2008), p. 116.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에서 프랑스는 서독의 재무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서독의 군대를 서독의 지휘권 아래 두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상 플레벤(René Pleven)은 유럽 동맹의 틀 안에 독일군을 묶어놓을 요량으로 유럽 방위장관의 지휘를 받는 유럽 공동군의 창설을 제안했다. 플레벤 플랜은 독일의 자체적 재무장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프랑스의 자율적 군사 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독일로서는 군사 분야에서 프랑스와 대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유럽공동군 계획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1952년 5월 파리에서, 여전히 초국가적 유럽 기구에의 참여에 미온적인 영국을 제외하고 ECSC의 6개 회원국만으로 유럽방위공동체(EDC) 조약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제휴가 유럽 공동방위 조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유럽 공동방위 계획은 논리적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의 통일된 외교와 국방 정책을 필요로 했으며 국가간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EDC 계획은 초국가적 주권을 지닌 유럽정치공동체(EPC)를 창안하자는 논의로 확대되었다. EDC와 EPC 구상은 ECSC가 마련한 경제 분야의 통합을 넘어서서 보다 민감한 사안인 국방과 정치 분야에까지 통합을 확대하려는 원대한 계획으로 유럽통합론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하지만 제4공화정 정부가 독일과의 물밑교섭 끝에 추진한 EDC 계획은 정작 제안국인 프랑스 국내에서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인도차이나에서 발생한 식민지 해방전쟁에 주력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로서는 영국마저 불참한 유럽공동군의 창설이 결국 독일에게 군사적 우위를 내주는 의외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드골 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EDC가 출범하면 프랑스의 주도권 약화와 독일의 패권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격렬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수상 멘데스 프랑스(Pierre Mendès France)는 뒤늦게 가맹국들에게 공동방위계획의 기간 단축과 초국가적 지휘권의 축소를 교섭하고 나섰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EDC 계획은 1954년 8월에 프랑스 의회의 인준을 통과하는 데 실패함으로써(319표 대 264표) 좌초하고 말았다. EDC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불신과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유럽통합 운동의 초기에 성급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공 가능성이 애초부터 불투명했던 것이다.

EDC의 좌초는 유럽 통합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 관계에도 커다란 위기를 몰고 왔다. 이미 EDC 조약을 승인한 독일로서는 프랑스 의회의 결의를

유럽통합에 대한 거부를 넘어 독일에 대한 반감으로 받아들였다.²¹⁾ EDC의 실패로 인해 프랑스는 유럽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 관계에서도 큰 부담을 안아야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응은 신속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프랑스 정부는,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1948년에 유럽 연합국들 사이에 체결한 브뤼셀 조약을 수정해서 독일을 포함시킨 공동 방위조약을 구성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로써 1954년 10월에 체결된 파리 협정에 의해, 패전국 독일과 이탈리아가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등 승전 5개국과 가상의 적 소련을 상대로 공동 방어를 구축하는 서유럽연합(WEU)이 결성되었다. 일단 독일을 서유럽 공동 방위기구 안에 묶어 놓은 만큼, 독일의 재무장 문제도 순조로이 해결되었다. 파리 협정은 독일의 NATO 가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듬해 독일은 원자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허용받은 것이다.

독일에게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해준 파리 협정은 또한 독일-프랑스 관계에서도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했다. 프랑스 수상 멘데스 프랑스와 독일 수상 아데나워는 파리 협정을 며칠 앞두고 인근 라 셀생클루(La Celle-Saint-Cloud)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영토 등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했다. 소련과의 외교 관계에서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 그리고 양국간의 통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간의 마지막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던 독일 남서부 자르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친을 가로막는 자르 문제가 프랑스와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라는 평화의 다짐 아래,²²⁾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교섭권을 인정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주권을 넘어선 유럽적 주권을 자르 지방에 부여하자는 타협안이 도출된 것이다.²³⁾ 라 셀생클루 회담은 그 합의 내용의 경증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미국의 중재나 유럽 기구를 통해서 다

21) F. Roth, *L'invention de l'Europe*(Armand Colin, 2005), p. 38.

22) K. Adenauer, *Mémoires*, t.II(1954-1958)(Hachette, 1967), p. 349.

23) 하지만 1955년 10월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자르 주민들은 유럽적 지위를 거부하고 독일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1956년 10월 27일 룩셈부르크 조약에 의해 자르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결국 자르 지방은 프랑스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서독에 귀속된 것이다.

자간에 이루어지던 양국의 만남과 대화가 처음으로 이자간의 직접적인 교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954년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이자간 교섭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⁴⁾

EDC 실패의 여파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통합을 추진할 명분을 잃고 양국간에 직접 대화 창구를 열기 시작한 반면, 당분간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군소국들이 통합 운동의 중심점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다. EDC의 좌초를 몰고 온 국내의 정파간의 대립에 실망한 장 모네는 ECSC의 고등관리청의 장직에서 물러나 6개국 유럽의 정치인, 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유럽합중국 행동위원회(Comité d'action pour les Etats-Unis d'Europe)를 결성하고 통합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조급한 초국가적 정치 통합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장 모네를 비롯한 유럽통합론자들은 다시 경제 분야로 눈을 돌려 유럽 6개국의 공동 관리 영역을 운송과 에너지를 비롯한 통상 일반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의 초국가적 통합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유럽통합론자들은 다시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장 모네의 후원을 얻은, 벨기에 외무장관 스파크(Paul-Henri Spaak)와 네덜란드 외무장관 베이안(Johan Beyen)은 1956년부터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창설을 제안했다. 1957년 3월, 로마조약으로 EEC와 Euratom이 공식 출범하면서 ‘6개국 유럽’의 통합 기구는 ECSC를 포함해서 모두 3개로 늘었다. Euratom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공동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로 당시 원자력 개발에 앞섰던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역내관세의 철폐와 공동시장의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EEC는 프랑스에게는 농산물 판매 시장으로, 독일에게는 번창하는 공산품 시장으로 커다란 유인력을 발휘했다. 이제 유럽 공동시장(Marché commun)의 출범으로 유럽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듬해 드골의 정계 복귀는 유럽 통합에 거친 파고를 예고했다.

24) G.-H. Soutou, *L'alliance incertaine, les rapports politico-stratégiques franco-allemands, 1954-1996*(Fayard, 1996), pp. 17-36.

IV. 유럽 통합과 독일-프랑스 화해 사이

(1) 드골의 유럽 구상과 대독일 화해 정책

1958년 5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벌어진 식민지해방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4공화정이 붕괴되고 드골이 정계 일선에 복귀했다. 드골의 권좌 복귀는 프랑스의 국내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독일 정책과 유럽통합 운동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10여 년에 걸친 ‘야인시절(traversée du désert)’에 드골은 제4공화정의 대독일 유화정책을 줄곧 비판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탄생, 독일의 재무장, 자르 지방의 독일 귀속 등 독일의 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비호 아래 탄생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드골은 히틀러의 제3제국을 잇는 “제4제국(Quatrième Reich)”의 출현을 보았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1870년, 1914년, 1939년 세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하고 유럽인들에게 독일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팽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⁵⁾ 서독 수상 아데나워가 여러 차례 프랑스에 대한 우호의 손길을 내밀자 드골은 본(Bonn) 정부가 크레플린 궁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한걸음 물러서며 “소비에트의 위협에 맞서 서독을 유럽 국가연합에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²⁶⁾ 하지만 독일의 재무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드골은 “우리가 스스로 패권의 길을 열어준다면, 이 사슬도 재갈도 없는 독일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다시 독일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²⁷⁾

더구나 드골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방위조약, 유럽경제공동체 등 통합유럽을 향한 유럽 6개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드골이 볼 때, 석탄과 철강의 “카르텔(pool)”에 불과한 ECSC는 프랑스 철강산업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며 농산물, 식민지 산품, 광물 등 프랑스가 경쟁력을 지닌 분야들이 포함되지 않는 한 결국 프랑스에 불리한 교섭으로 그

칠 것이었다.²⁸⁾ EDC 역시 “미국의 지휘를 받는 무국적 군대”에 지나지 않으며 프랑스의 독자적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독일의 군사력 강화를 초래할 것이었다.²⁹⁾ 드골은 즐겨 ECSC와 EDC에 대해 ‘석탄과 철강의 뒤범벅(méli-mélo de charbon et d’acier)’이며 ‘가공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ien chimérique)’이라고 비아냥거리곤 했다.³⁰⁾

권좌에 복귀한 드골은 통합유럽 기구들에 대한 ‘야인시절’의 강경한 비판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유럽 통합을 고무하는 여러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일단 EDC를 좌초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드골은 EEC가 추진하는 유럽공동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그 초국가적 집행권이 대폭 축소된 데다가 프랑스 농산물의 판매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고집스럽게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드골이 구상하는 유럽은 종전 직후 유럽통합론자들이 꿈꾸던 유럽과는 크게 달랐다. 그것은 ‘대서양의 유럽(Europe atlantique)’에 대치되는 ‘유럽인의 유럽(Europe européenne)’이었으며, ‘연방체 유럽(Europe fédérative)’이 아닌 ‘국가들의 유럽(Europe des états)’이었다. 그는 대서양 구도에 편입되어 미국에 의존적인 외교관계에 머물고자 하지 않았고, 미·소 양대 진영에서 독립한 제3 블록으로서 자체방위를 담당하는 유럽을 원했다. 나아가 그는 유럽통합에 찬성하면서도 국가주권보다 상위에 있는 초국가적 권위체의 설립에 대해 반대했으며 개별국가들의 주권이 보장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의 유럽기구를 구상했다. 요컨대 그는 프랑스가 통합 유럽의 기수로서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유럽 문제에서 프랑스가 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³¹⁾

28) “Confé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Orsay(21 décembre 1951)”, *Ibid.*, pp. 480-493.

29) “Conférence de presse tenue à l’Hôtel Continental(12 novembre 1953)”, *Ibid.*, p. 595.

30) J. Binoche, *De Gaulle et les Allemands*(Editions Complexe, 1990), p. 110.

31) 드골 대통령의 유럽관과 유럽통합 전략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참조하라. R. Massip, *De Gaulle et l’Europe*(Flammarion, 1963); G. Gozard, *De Gaulle face à l’Europe*(Plon, 1976); P. Maillard, *De Gaulle et l’Europe, entre la nation et Maastricht*(Tallandier, 1995);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n son siècle, actes des journées internationales tenues à l’UNESCO, Paris, 19-24 novembre 1990, t.V(l’Europe)*(Plon, 1992).

25) “Discours prononcé à la pelouse de Bagatelle(1er mai 1949)”,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I, pp. 286-287.

26) “Allocution prononcée à Saint-Mandé(4 novembre 1951)”,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 p. 471.

27) “Discours prononcé à Paris(23 février 1952)”,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I, p. 502.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여론이 드골의 권좌 복귀에 경계의 눈초리를 던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드골은 1958년 9월 14일에 자신의 향리 콜롬베(Colombey-les-deux-Eglises)를 직접 방문한 독일 총리 아데나워를 맞아 유럽공동시장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제4공화정 기에 맺은 모든 대외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거듭된 다짐을 통해 독일 측의 우려를 누그러뜨려야 했다.³²⁾ 하지만 일주일 후 드골의 행보는 아데나워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드골은 미국·영국·프랑스 삼국이 나란히 대서양동맹을 이끄는 ‘주재부(主宰部, directoire)’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담은 외교 각서를 워싱턴과 런던에 보냈다. NATO를 이끄는 삼각 리더십을 구성하려는 드골의 계획은 유럽 대륙의 문제에서 프랑스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내를 담은 것으로 프랑스와의 대등한 지위를 얻어내려는 독일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영국과 미국이 단호하게 거부 신호를 보내자 드골은 차선책으로 유럽 통합을 주도할 동반자로 독일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택했다. 요컨대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통합 유럽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프랑스의 “주재부 전략(Directoire approche)”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이다.³³⁾ 통합 유럽의 향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골이 줄곧 ‘6개국 유럽’과의 다자간 교섭과 나란히 독일과의 배타적인 양자간 교섭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양자간 교섭은 두 정상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표현되었다. 1958년 9월에 첫 만남을 가진 후 드골과 아데나워는 1962년 중엽까지 4년여 동안 무려 15 차례에 걸쳐 두 나라를 오가며 공식·비공식 회동을 계속했으며, 40여 통의 서신을 교환했다.³⁴⁾ 1959년 초 흐루시초프의 ‘최

32) 1970년에 출판한 『희망 회고록』에서 드골은 아데나워와의 첫 만남에서 양국간의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둘 사이의 “개인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비교적 간단하게 적고 있다. Ch. de Gaulle, *Mémoire d'espoir*, t.I(le renouveau 1958-1962)(Plon, 1970), pp.184-188. 반면에 아데나워는 『회고록』(1966)에서, 드골과의 만남에서 독일-프랑스 우호에 관해 나눈 대화에 대해 일종의 공식 보고문 형식으로 더욱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적대감은 영원히 사라져야 하며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협동하며 살고 나란히 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과 프랑스 공화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유럽에서의 모든 건설적 작업의 토대라는 확신을 갖는다.” K. Adenauer, *Mémoires [Erinnerungen]* t.II(1954-1958)(Hachette, 1969), p. 479.

33) T. Pederson, *Germany, France and the Integration of Europe, A Realist Interpretation*(London: Longman, 1997), p. 81.

34) Ch. de Gaulle, *Mémoire d'espoir*, t.I(le renouveau 1958-1962)(Plon, 1970), p. 191.

후통첩’으로 ‘베를린 위기’가 발생하고 동-서독 간에 긴장이 감돌았다. 3월 4일, 아데나워 일행이 프랑스를 방문하자, 드골은 프랑스가 베를린 위기에서 서독의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후, NATO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불문하고 향후 유럽 문제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제휴를 유지하자고 제의했다. 3월 7일, 드골이 지중해에 배치된 프랑스 해군을 NATO의 통제권에서 이탈시키는 조취를 취하자,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독자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드골은 3월 25일에 언론을 통해 독일 동부 국경 문제에서 서독의 입장을 지지하며 동독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본(Bonn) 정부에 화친의 손길을 내밀었다.³⁵⁾ 1959년 12월에 파리를 방문한 아데나워는 베를린 위기 때부터 프랑스가 보여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양국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협정문을 만들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독일-프랑스 관계를 문서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³⁶⁾

1960년 7월 29-30일에 파리 근교 랑부예(Rambouillet)에서 열린 회담은 드골이 유럽 통합의 향배를 놓고 두 나라가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자신의 제의에 대해 비록 구속력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아데나워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독일-프랑스 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훗날 드골은 랑부예 회담에서 나눈 대화를 9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기록을 남겼다.³⁷⁾ 드골의 기록에 따르면, 유럽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유럽에 의해 그리고 유럽을 위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유럽공동체는 ‘초국가적 기구(organismes supranationaux)’가 아닌 ‘국가들의 연합(coopération des Etats)’이 되어야 하며 NATO는 유럽인의 존립 기반에 맞추어 개혁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될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합의(accord)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틀 후 드

35) “Confé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e l’Elysée(25 mars 1959)”,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II(Avec le renouveau 1958-1962)(Plon, 1970), pp. 82-90.

36) J. Bariéty, “De Gaulle, Adenauer et la genèse du traité de l’Elysée du 22 janvier 1963”,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n son siècle*, actes des journées internationales tenues à l’UNESCO, Paris, 19-24 novembre 1990, t.V(l’Europe)(Plon, 1992), p. 354.

37) “Note au sujet de l’organisation de l’Europe, Rambouillet, 30 juillet 1960”, Ch. de Gaulle, *Lettres, notes et carnets, 1958-1960*(Plon, 1985), pp. 382-383.

골은 외무장관 쿠브 드 뮈르빌(Maurice Couve de Murville)에게 아데나워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유럽 건설의 쇠가 달았으니 지금 두드려야 하오... 프랑스-독일 용무(affaire)를 당장 가동시키시오”라는 지침을 보냈다.³⁸⁾ 9월 22일에는 아데나워에게 서신을 보내 “우리는 유럽 연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토대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합의(accord)이어야 합니다”라며 거듭 랑부예의 대화를 재확인하고자 했다.³⁹⁾ 요컨대 드골은 유럽 건설의 방향에 대해 ‘6개국 유럽’ 사이의 협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추진력으로 독일-프랑스 사이의 배타적인 양자간 협의의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아데나워는 NATO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드골의 복안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독일이 프랑스와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유럽 기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골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더구나 1959년 초의 베를린 위기 때부터 드골이 동독과 소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믿음직한 우방일 수 있었다. 유럽 구상과 독일-프랑스 관계에 대한 드골과 아데나워 사이의 밀월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 7월의 랑부예 회담은 1961-1962년에 6개국 유럽의 구도를 뒤흔들어 놓았던 푸셰 플랜과 더 나아가 1963년의 엘리제조약의 전주곡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2) 푸셰 플랜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대한 드골의 구상은 소위 ‘푸셰 플랜’으로 구체화되었다. 1961년 2월, 6개국 유럽이 공동 정치기구의 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각국 정상 또는 각료들 사이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국방의 현안을 논의할 정부간 기구를 설치하여 궁극적으로 ‘유럽 국가연합(Confédération européenne)’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 프랑

38) “Lettre à Maurice Couve de Murvil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Ibid.*, p. 383.

39) “Lettre à Konrad Adenauer, chancelier de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Ibid.*, pp. 396-397.

40) J. Bariéty, “les entretiens de Gaulle-Adenauer de juillet 1960 à Rambouillet: Prélude au plan Fouchet et au Traité de l’Elysée”,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vol. 29, no. 2(avril-juin 1997), p. 175.

스 측 대표 푸셰에게 일임되었다. 1961년 7월, 그 동안 유럽공동체의 외곽에서 줄곧 독자 행보를 걸던 영국이 돌연 유럽공동시장에 가입할 의사를 내비추자 영국이 가입할 경우 유럽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프랑스는 6개국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1961년 10월, 6개국 대표들은 푸셰 위원회가 제출한 ‘국가연합(union d’états) 건설 조약안’을 놓고 토의에 들어갔다.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던 1962년 1월, 프랑스 대표단은 드골의 지침을 받아 돌연 더욱 강화된 제안서를 내밀었다. ‘푸셰 플랜 II’는 “푸셰 플랜 I’과는 달리, NATO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내용과 기존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존속에 대한 보장안을 삭제한 것이었으며 유럽공동체 가입 조건을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정함으로써 영국의 예상되는 가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초국가적 주권기구의 설치를 배제하는 이러한 국가연합 구상은 각국의 주권에 기초한 재래식 국제기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며, 따라서 유럽공동체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일종의 주재부(directoire)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었다. 드골의 복안은 로마조약 이후에 진전되어온 유럽 통합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거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초국가적 주권 기구를 배제한 국가간의 연합은 결국 프랑스와 독일 두 강대국의 위상만 높일 것이라고 내다본 베네룩스 3국에게 영국의 가입 여부는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다.⁴¹⁾ 1962년 4월, 베네룩스 3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들은 푸셰 플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항 플랜 내놓고 프랑스와 최종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국가연합’ 계획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⁴²⁾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드골은 대국민 회견을 통해 초국가적 유럽 건설은 “무국적(hybride)”이라고 성토했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유럽 4개국과 NATO에 대한 거친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⁴³⁾ 드골의 독단적인 행보가 계속되자 당

41) 푸셰 플랜에 대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외무장관들이 각각 발표한 공식 논평 문은 J.-M. Masclet, *L’Europe politique* (PUF, 1972), pp70-73에 실려 있다.

42) ‘푸셰 플랜 I’, ‘푸셰 플랜 II’, ‘5개국 대항플랜’ 문건에 대해서는 P. Gerbet, F. de la Serre & G. Nafilyan(ed.), *L’Univers politique de l’Europe, jalons et textes*(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pp. 114-130을 보라.

43) “Conférence de presse du 15 mai 1962”,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II, p. 407.

시 풍피두 내각에 참여하고 있던 인민공화운동(MRP) 소속 각료 6명은 항의의 뜻으로 전격적인 사임을 발표했으며, 293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유럽 선언’을 발표하며 드골의 유럽 정책에 항의했다. 아데나워 역시 프랑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내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장 모네의 유럽합중국 행동위원회는 6월 26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이 “우월과 지배의 정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초국가적 연방의 성격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가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⁴⁴⁾ 드골과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의 제휴에 앞장섰지만 그와 동시에 ‘연방제 유럽’ 더 나아가 ‘대서양 유럽’으로 기울던 모네는 이제 유럽통합 구상을 놓고 드골과는 다른 길로 접어든 것이다.⁴⁵⁾ 실로 푸셰 플랜은 유럽의 외교와 프랑스의 내정을 뒤흔들어 놓은 불협화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정치연합의 창설은 물론 통합운동 자체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V. 엘리제조약: 다자간 교섭에서 양자간 교섭으로

(1) 조약을 향하여

푸셰 플랜이 완전히 좌초하자 드골은 예정했던 대로 독일로 눈을 돌렸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두 나라 국민의 압박한 안전, … 따라서 유럽 전체의 운명이 이 연대의식에 달려 있습니다.”⁴⁶⁾ 정치적 통합을 위한 다자간 협의에서 실패한 드골은 독일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출몰 두 국민의 화합을 강조하고 담화를 내놓았다. 드골의 초청을 받은 아데나워는 1962년 7월에 일주일간 프랑스를 공식 순방했다. 아데나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포병의 공습을 받아 큰 손상을 입었던, 프랑

44) “Déclaration du Comité d’action pour les Etats-Unis d’Europe”, P. Gerbet, F. de la Serre & G. Nafilyan(ed.), *L’Univers politique de l’Europe, jalons et textes*, p. 137.
 45) 장 모네와 드골의 유럽통합 구상과 대립에 대해서는 특히 W. Loth, “Jean Monnet, Charles de Gaulle et le projet d’union politique(1958-1963)”, P. Gerbet, “Jean Monnet-Charles de Gaulle, deux conceptions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G. Bossuat & A. Wilkens(dir.), *Jean Monnet, l’Europe et les chemins de la Paix*(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99)를 참조하라.
 46) “Conférence de presse du 15 mai 1962”,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II, p. 411.

스의 유서 깊은 성지(聖地) 랭스(Reims)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돌며 양국민의 우의를 다짐했으며, 드골과 함께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함께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두 나라의 공식 화해를 앞둔 대국민 홍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순방 중인 7월 5일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드골과 아데나워는 두 나라만의 정치 연합을 결성하자는 ‘재촉’과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다는 ‘언질’을 주고받았다.⁴⁷⁾ 나아가 드골은 7월 15일에 아데나워에게 보낸 서한에서 “6개국 유럽이 우리[프랑스와 독일]가 정한 토대 위에서 정치 연합에 대한 협정을 맺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독일-프랑스 유대를 조직하게 되든가… 이 점에서 다가올 9월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다시금 다짐을 받고자 했다.⁴⁸⁾

9월에 들어 이번에는 일주일간 드골의 독일 순방이 독일 국민의 열띤 환대 속에 이어졌다. 환영 인파에 문혀 드골은 “위대한 독일 민족(das grosse deutsche Volk)”를 치켜세우면서 “화합”, “우애”, “공영”을 외쳤다.⁴⁹⁾ 9월 5일에 본에서 열린 아데나워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7월 5일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협약이 오갔다. 나머지 4개국을 배제한 가운데 두 나라의 역사적 ‘화해’를 명분으로 내건 물밑 교섭이 진행된 것이다.

1962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외교 및 국방 정책의 협조, 교육 사업과 청소년 교류의 증진 등 합의문의 밑그림을 담은 ‘외교 각서(mémorandum)’를 보내고 서둘러 ‘독일-프랑스 협조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독일 측의 반응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집권당 내부의 심각한 내홍과 조급한 양국간 합의에 대한 연립 내각 내부에서의 반발로 인해 독일의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파리와 본을 오고가는 끈질긴 협상 끝에 1963년 1월

47) 1962년도 프랑스외교문서는 1999년에 공개·출판되었다.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2 vols(Documentation française, 1999). 당시의 외교문서는 드골과 아데나워가 7월 5일에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드골: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독일 연방공화국은 사실상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두 나라에 국한된 정치 연합을 프랑스와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데나워: “당신의 질문에 답하여 나는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한정된 연합을 수용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에게 문을 열어두면서 말입니다.” B. Schoenborn, *La Mésentente apprivoisée, De Gaulle et les allemands, 1963-1969*(PUF, 2007), pp. 18-19에서 재인용.

48) “Lettre à Konrad Adenauer, chancelier de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Ch. de Gaulle, *Lettres, notes et carnets, 1961-1963*(Plon, 1986), p. 249.

49) “Allocution prononcée à Bonn devant la foule”,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V(Pour l’effort 1962-1965)(Plon, 1970), p.7, p.13.

12일에 마침내 프랑스의 외교 각서를 바탕으로 다듬어진 ‘의정서(procès-verbal)’가 작성되었다. 1월 14일, 드골이 돌연 영국의 유럽공동시장 가입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⁵⁰⁾ 독일에서는 다시 프랑스와의 배타적 제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은 독일-프랑스 양국 제휴가 결국 6개국 유럽의 협조, 더 나아가 통합 유럽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과 여론의 거센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는 퇴진 후의 상황 변동을 염두에 둔 듯 ‘의정서’를 ‘조약(traité)’으로 바꾸어 국가간 합의의 구속력을 한층 강화한 후 프랑스 측에 제시했다.⁵¹⁾

마침내 1963년 1월 22일, 프랑스의 엘리제궁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프랑스-독일의 우호와 협력 조약’이 체결되었다. 전날 저녁, 장 모네는 유럽합중국 행동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파리에서 아데나워를 만나 영국의 가입 배제를 전제로 하는 양국간의 조약 체결을 재고하도록 마지막으로 설득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드골과 아데나워는 공동 선언을 통해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의 화해가 수백 년 묶은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두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강화가 통합 유럽의 길로 향한 불가결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⁵²⁾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8년 만에 화해와 공영의 시대가 막을 연 것이다.

엘리제조약은 앞으로 두 나라가 (1) 모든 주요 외교 현안들에 대한 정책을 서로 자문하고, (2) 전략과 전술 및 군장비 부문에서 공동 작업을 도모하며, (3) 청소년의 교육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기구를 창설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조약 규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 정부 수반은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국방부와 외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3개월

50) “Confé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e l’Elysée”,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V, pp. 61-62.

51) J. Bariéty, “Le chemin français vers le traité de l’Elysée”, C. Defrance & U. Pfeil (dir.), *Le Traité de l’Elysée et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1945-1963-2003*, p. 71.

52) 공동 선언과 조약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raité entr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sur la coopération franco-allemande(22 janvier 1963)”, P. Jardin & A. Kimmel,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puis 1963*(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pp. 53-57.

마다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합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이로써 프랑스-독일 동반자 시대를 향해 정부간 협력 체제가 제도화 된 것이다.

(2) 기로에 선 조약

하지만 안팎의 불협화음 속에서 모진 진통 끝에 탄생한 엘리제조약의 장래는 애초부터 불확실했으며, 독일-프랑스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없었다. 독일에서 집권당 내 반대파와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엘리제조약이 유럽 통합에 대한 사망 언도이며 독일의 이해관계와 합치하지도 않을뿐더러 궁극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중 언론은 서슴없이 “드골의 유럽은 히틀러의 유럽”이라거나 “드골, 부활한 나폴레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⁵³⁾ 여론 역시 독일-프랑스의 화해가 갖는 역사적 의의보다 독일의 안보와 국방의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영국과 미국을 배제한 유럽, 특히 미국의 방위 구도에서 벗어난 유럽은 결국 소련 앞에서 독일을 무장해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1963년 5월 16일, 독일 하원(Bundestag)은 엘리제조약이 “독일연방공화국이 맺은 다자간 조약들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 유럽과 미국 사이의 긴밀한 유대 강화, … NATO의 틀에서의 공동방위, … 영국과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열려 있는 유럽 통합 등을 촉진한다”라는 구절이 담긴 머리글(préambule)을 집어넣은 채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⁵⁴⁾ 독일은 프랑스와의 배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NATO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국이 포함된 다자간 유럽 건설을 우선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약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머리글이 채택된 것은 놀랍게도 장 모네의 끈질긴 교섭이 성공한 결과였다. 조약 비준에 낙담한 장 모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곧 조약에 반발하는 독일 측 정치인들과 접촉을 벌여 의회 비준 시 “조약에 대한 해석 문구를 머리글의 형태로 집어넣도록 하는 전략”을 짰던 것이다.⁵⁵⁾ 이로써 드골의 유럽 구상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조약’과 대서양 유럽을 표방하는 ‘머리글’이 나란히 공존하게 되었다.

53) F.-G. Dreyfus, “L’opinion allemande devant le traité de l’Elysée du 22 janvier 1963”, *Relations internationales*, no. 37(printemps 1984), p. 117.

54) P. Jardin & A. Kimmel,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puis 1963*, p. 76.

55) J. Monnet, *Mémoires*(Fayard, 1976), p. 551.

더구나 1963년 10월에 아데나워가 퇴진하고 친영파로 분류되는 에르하르트(Ludwig Erhard)가 수상 직에 올랐다. 에르하르트는 “프랑스-독일 조약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전임자의 외교 노선과는 선을 그고자 했다. 이듬해부터 남미에서 캐나다를 거쳐 극동으로 이어지는 드골의 세계 정책은 독일 정부와 줄곧 엇박자를 낳았다. 독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프랑스의 강국 정책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엘리제조약에서 약속한 양국 정상과 외무장관들의 정례 회담은 실질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에르하르트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직후 1964년 7월 23일에 가진 언론 담화에서 드골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진정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연대”도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⁵⁶⁾ 조약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듯이 그는 “나는 다시 배필을 잃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⁵⁷⁾

독일과의 관계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드골이 1965년부터 소련 측에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독일-프랑스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⁵⁸⁾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까지(de l'Atlantique à l'Oural)”⁵⁹⁾ 유럽의 화합

56) “Confé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e l'Élysée(23 juillet 1964)”,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V(Pour l'effort 1962-1965)(Plon, 1970), pp. 229-230.

57) P. Schwarz, *Adenauer, Der Staatsmann 1952-1967*, Stuttgart, 1991, p.888. C. Defrance, “Les historiens et le traité de l'Élysée”, *Bulletin de l'Institut Pierre Renouvin*, no. 15(printemps 2003), p. 21에서 재인용. 엘리제조약에 따라 양국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 1963년 7월 4일에 독일을 방문한 드골은 아데나워를 만나 조약의 확실한 전망을 놓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드골: “조약이란 젊은 처녀나 장미와 같은 것이지요. 별로 오래 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독일과의 조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닐 터이니 말입니다.” 아데나워: “장미와 젊은 처녀는 빨리 시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가시를 가장 많이 가진 식물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이 우호는 항상 꽃봉오리를 간직할 장미와 같습니다. 이 밀접한 우호는 새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우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럽을 건설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드골: “수상 전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조약은 한 송이 장미꽃이나 한 그루 장미나무가 아니라 장미화원입니다. 장미는 아침 한 나절을 버티지 못합니다. 젊은 처녀도. 하지만 장미화원은 원하는 만큼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A. Passeron, *De Gaulle parle 1962-1966*(Fayard, 1966), t.II, p. 342.

58) G.-H. Soutou, *L'alliance incertaine, les rapports politico-stratégiques franco-allemands, 1954-1996*, p. 283.

59) “Confé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e l'Élysée(9 septembre 1965)”, Ch. de

이 이어져야 한다는 드골의 공식담화에서 프랑스의 외교 전환을 감지한 독일은 실질적인 대화 창구를 파리보다 워싱턴에서 찾으려 했다. 드골의 퇴진에 이어서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표방한 1970년까지 독일-프랑스 관계는 담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엘리제조약 체결은 유럽 건설과 관련된 인접국들에게 사실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독일-프랑스 베네룩스 3국은 독일-프랑스의 제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조약에 의해 두 강대국이 유럽 공동체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염려했으며,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의 가입을 다시 추진했다. 유럽위원회 외장 할슈타인(Walter Hallstein) 역시 조약에 수반된 양국간 교섭 절차가 유럽공동체 기구들의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엘리제조약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드골의 ‘주재부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이다.⁶⁰⁾ 결국 유럽통합 운동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으려면 1970년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VI. 맺음말

엘리제조약은 1958년 5월 드골이 권좌에 복귀한 이후부터 4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더 자세히 말하자면 드골과 아데나워 사이의 ‘긴밀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미·소간의 대립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특히 새로운 유럽 정치공동체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는 공동보조를 취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1959년 12월에 아데나워가 양국의 화해를 문서화하자는 제안을 먼저 내놓았다면, 드골은 1960년 7월부터 협상의 기준을 유럽 6개국의 다자간 교섭에서 양국간의 배타적 교섭으로 돌렸다. 1962년 말, 프랑스 측이 제시한 외교 각서를 바탕으로 양국간 합의를 담은 의정서가 만들어졌으며, 마침내 아데나워는 양국간 협상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서를 조약으로 바꾸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엘리제조약은 프랑스의 제안과 의도가 더 강하게 투영된 조약이었으며 드골의 유럽 구상의 일환이었다.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IV(Pour l'effort 1962-1965)(Plon, 1970), pp. 379, 385.

60) Ch. Zorgbibe, *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PUF, 1993), p. 65.

1962년 10월에 치른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한 달 후 총선에서 승리해 안정된 다수당을 확보한 드골 정부가 강력하게 대독 화해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연립 내각 내의 반발과 여론의 우려에 봉착한 아데나워 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처지였던 것이다.

엘리제조약이 독일-프랑스 관계가 숙적에서 동반자로 이행하는 분수령이었으며 ‘프랑스-독일 배필’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프랑스의 화해가 1963년의 조약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며, 또 조약 체결 후에 양국의 관계가 성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바뀐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더구나 엘리제조약은 경제 통합에서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유럽공동체 운동이 좌초한 결과인 동시에 통합 유럽의 진전과는 거리를 두는 행보였다.

요컨대 엘리제조약은 멀리는 1950년대 초부터 한걸음씩 진척되어 온 두 나라 사이의 화해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가까이는 1962년 푸세 플랜의 실패에 다른 반작용이기도 했다. 독일-프랑스의 동반자 관계를 앞당기려 하는 자들은 조약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가 경색되는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자들은 조약에서 진정한 유럽공동체의 전망을 가로막는 복병을 보았다. 나머지 유럽 4개국은 엘리제조약에 따른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보조로 결국 유럽공동체 내에서 두 나라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균형추로 영국의 가입과 친대서양 노선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엘리제조약은 적어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유럽 통합의 험난한 길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⁶¹⁾ 독일-프랑스 화해가 유럽통합의 추동력 구실을 하기보다 통합을 가로막거나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국제관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엘리제조약 40주년을 맞이한 2003년 벽두를 장식한 양국 정부의 성대한 기념행사의 뒤끝에서 한 정치평론가가 조약 체결 당사자들과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회고하면서, “조약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논평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⁶²⁾

61) P. Gerbet, “Le rôle du couple franco-allemand dans la création et le développement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H. Ménudier(dir.), *Le couple franco-allemand en Europe*(Publications de l’Institut d’Allemand, 1993), pp. 38-39.

62) A. Grosser, “Deux siècles de haine et de passion”, *L’Express*(2 janvier 2003).

독일-프랑스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뀌고 이에 따라 독일-프랑스 주축이 유럽 통합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달라진 국제 정세 아래에서였다. 프랑스-독일 커플의 ‘탄생’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련기를 거쳐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제조약의 진정한 역설은 탄생 직전부터 거친 반발을 사고 순탄하지 못한 출발 속에서 당사자들도 홀대하던 조약이 한참 후에 돌연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⁶³⁾ 역사가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면을 달리해서 논의할 문제이다. (전북대 사학과)

〈투고일자: 2008. 7. 2, 심사일자: 2008. 8. 4, 게재확정일자: 2008. 8. 10〉

주제어 : 엘리제조약(Elysée Treaty), 프랑스-독일 화해(Franco-German Reconciliation),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푸세 플랜(Fouchet Plan)

63) H.-P. Schwarz, “Le chemin allemand vers le traité de l’Elysée”, C. Defrance & U. Pfeil (dir.), *Le Traité de l’Elysée et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1945-1963-2003*(CNRS Editions, 2005) p. 47.

[부록 1]

엘리제조약 (축약)
(1963년 1월 22일)

1. 공동 선언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의 화해가 수세기에 걸친 대립을 종식시킬 것이며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인하고...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가 두 국민의 목표인 통합 유럽으로 향한 길목의 불가결한 단계임을 인정하면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드골 장관과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는 다음 조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두 국가 사이의 협조의 조직과 원칙에 동의한다.

2. 조약

1963년 1월 22일자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의 양국 사이의 협력 원칙들과 조직에 대한 공동 선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에 합의한다.

(1) 조직

1.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지침들을 주며, 다음과 같이 정해진 계획안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씩 회합을 갖는다.
2. 외무부 장관들은 계획안의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외무장관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회합을 갖는다. 양국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접촉과는 별도로, 정치·경제·문화 부문을 각각 담당하는 양국 외무부서의 고위 관료들은 파리와 본을 오가며 한 달에 한번씩 회합을 갖는다. 이는 현행 문제들을 점검하고 장관급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한편, 양국의 외교 사절과 영사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에 근무하는 양국의 상임 대표들은 공동의 관심사가 걸린 문제들을 놓고 모든 필요한 접촉을 갖는다.

3. 국방·교육·청소년 문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책임 당국자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이 회합은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독·불 문화위원회, 참모부 상임 단체들—의 활동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기구들의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외무부 장관들은 상호협조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모임들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것이다.
 - a) 국방부 장관들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회합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은 독일 측에서 문화 부문에서의 협조를 수행할 목적으로 임명한 인사를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날 것이다.
 - b) 양국의 군 참모장들은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회합을 갖는다. 불가피한 경우, 책임 있는 대표자들로 대체될 수 있다.
 - c) 프랑스 측의 청소년 및 체육 관계 고위 당국자는 적어도 2개월마다 한 번씩 독일 측의 가족 및 청소년부 장관 또는 그 대표자와 회합을 갖는다.
4. 양국에서 부처간 위원회는 협조에 따를 문제들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부처간 위원회는 외무부 고위 공직자에 의해 주재되며 모든 관련 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부처간 위원회의 역할은 관련 부처들 사이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며 독·불 협력의 현황에 대해 자기 정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부처간 위원회는 또한 협조 계획안을 집행하고 나아가 새로운 영역들로 협조를 확대할 목적에서 이에 유용한 모든 제안을 내놓는 책임을 진다.

(출전: *Documentation française*, 1963)

[부록 2]

독일연방공화국 연방하원의 엘리제조약 비준동의안 머리말 (축약)
(1963년 6월 15일)

독일연방공화국과 프랑스공화국 사이에 1963년 1월 22일에 맺은 조약이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 사이의 화해와 우호를 깊이고 넓힐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조약이 독일연방공화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약들에서 비롯된 권리와 의무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년 전부터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해온 [다음과 같은] 커다란 목표들을 이 조약의 실행을 통해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 자유 국민들 간의 연합의 유지와 강화, 특히 유럽과 미국 사이의 긴밀한 제휴의 유지와 강화
- 독일 국민의 자율결정권 실현과 독일 통일의 수립
- 북대서양동맹의 틀 안에서의 공동방위와 북대서양동맹 회원국 군대들의 통합
- 영국과 그 밖의 가입 희망국들을 가담시키며 유럽공동체들의 창설에 의해 마련된 틀 안에서의 유럽 통합과 이 공동체들의 강화
- 유럽경제공동체, 영국, 미국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 사이의 협상에 의한 통상 장벽의 제거

이 목표들에 의해 인도되는 프랑스-독일의 협조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며 따라서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연방하원은 다음과 같은 법안을 채택한다.

(출전: *Bundesgesetzblatt*, Teil II, 1963)

〈참고문헌〉

-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의 기원과 의미”, 『프랑스사연구』, 제6호(2002년 2월).
- 이용재·김승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동북아역사재단, 2007.
- Adenauer, Konrad, *Mémoires [Erinnerungen]*, 4 vols, Hachette, 1969.
- Bariéty, Jacques, “les entretiens de Gaulle-Adenauer de juillet 1960 à Rambouillet: Prélude au plan Fouchet et au Traité de l’Elysée”, *Revue d’Allemagne et des pays de langue allemande*, vol. 29, no. 2, avril-juin, 1997.
- _____, “De Gaulle, Adenauer et la genèse du traité de l’Elysée du 22 janvier 1963”,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n son siècle*, actes des journées internationales tenues à l’UNESCO, Paris, 19-24 novembre 1990, t.V(l’Europe), Plon, 1992.
- Binoche, Jacques, *De Gaulle et les allemands*, Editions complexe, 1990.
- _____, *Histoire d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 1789 à nos jours*, Armand Colin, 1996.
- Bossuat, Gérard & Wilkens, Andreas, dir., *Jean Monnet, l’Europe et les chemins de la Paix*,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99.
- de Gaulle, Charles, *Discours et messages*, t.I(Pendant la guerre 1940-1946), Plon, 1970.
- _____, *Discours et messages*, t.II(Dans l’attente 1946-1958), Plon, 1970.
- _____, *Discours et messages*, t.III(Avec le renouveau 1958-1962), Plon, 1970.
- _____, *Discours et messages*, t.IV(Pour l’effort 1962-1965), Plon, 1970.
- _____, *Lettres, notes et carnets, 1958-1960*, Plon, 1985.
- _____, *Lettres, notes et carnets, 1961-1963*, Plon, 1986.
- _____, *Mémoire d’espoir*, t.I(le renouveau 1958-1962), Plon, 1970.
- Defrance, Corine & Pfeil, Ulrich, dir., *Le Traité de l’Elysée et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1945-1963-2003*, CNRS Editions, 2005.
- Defrance, Corine, “Les historiens et le traité de l’Elysée”, *Bulletin de*

- l'Institut Pierre Renouvin*, no. 15, printemps, 2003.
- Dreyfus, François-Georges, "L'opinion allemande devant le traité de l'Élysée du 22 janvier 1963", *Relations internationales*, no. 37, printemps, 1984.
- _____,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Ménudier, Henri, dir., *La république fédérale d'Allemagne, dan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ditions Complexe, 1990.
- Gerbet, Pierre, "La genèse du Plan Schuman, des origines à la déclaration du 9 mai 195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6, no. 3, 1956.
- _____, "Le rôle du couple franco-allemand dans la création et le développement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H. Ménudier, dir., *Le couple franco-allemand en Europe*, Publications de l'Institut d'Allemand, 1993.
- _____, de la Serre, Françoise & Nafilyan, Gérard, *L'Union politique de l'Europe, jalons et text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 Gozard, Gilles, *De Gaulle face à l'Europe*, Plon, 1976.
- Guieu, Jean-Michel, Le Dréau, Christophe, Raflik, Jenny & Warloutzet, Laurent, *Penser et construire l'Europe au XX^e siècle*, Belin, 2008.
- Guillen, Pierre, *La Question allemande 1945 à nos jours*, Imprimerie Nationale Editions, 1996.
-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n son siècle*, actes des journées internationales tenues à l'UNESCO, Paris, 19-24 novembre 1990, t.V(l'Europe), Plon, 1992.
- Jansen, Thomas, "L'importance du traité franco-allemand dans le cadre du processus d'intégration européenne", Martens, Stephan, dir., *L'Allemagne et la France, une entente unique pour l'Europe*, L'Harmattan, 2004.
- Jardin, Pierre & Kimmel, Adolf, *L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puis 1963*,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 Jeismann, Michael, *La Patrie de l'ennemi, la notion d'ennemi national et la représentation de la nation en Allemagne et en France de 1792 à 1918*, CNRS Editions, 1997.
- Jurt, Joseph, "Le couple franco-allemand, Naissance et histoire d'une métaphore", *Cahiers d'Etudes germaniques*, no. 41, 2001.
- Lacouture, Jean, *De Gaulle*, t.III(Le souverain), Seuil, 1986.

- Maillard, Pierre, *De Gaulle et l'Europe, entre la nation et Maastricht*, Tallandier, 1995.
- _____, *De Gaulle et le problème allemand, les leçons d'un grand dessein*, François-Xavier de Guibert, 2001.
- Masclat, Jean-Claude, *L'Europe politique*, PUF, 1972.
- Massip, Henri, *De Gaulle et l'Europe*, Flammarion, 1963.
- Ménudier, Henri, "La rupture Est-Ouest et ses conséquences pour l'Allemagne", Ménudier, Henri(ed.), *L'Allemagne occupée, 1945-1949*, Editions Complexe, 1990.
- Milward, Alan,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2*, Routledge, 1984.
- _____,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State*, Routledge, 1992.
- Monnet, Jean, *Mémoires*, Fayard, 1976.
- Nora, Pierre, *Les Lieux de mémoire*, t.I(La république), Gallimard, 1984.
- Passeron, André, *De Gaulle parle, 1962-1966*, 2 vols. Fayard, 1966.
- Pederson, Thomas, *Germany, France and the Integration of Europe, A Realist Interpretation*, Longman, 1997.
- Robert, Frank, "La construction de l'Europe: une histoire cyclique", *Questions internationales*, no. 7, mai-juin, 2004.
- Roth, François, *L'invention de l'Europe*, Armand Colin, 2005.
- Schonenborn, Benedikt, *La mésentente apprivoisée, de Gaulle et les Allemands, 1963-1969*, PUF, 2007.
- Soutou, Georges-Henri, *L'alliance incertaine, les rapports politico-stratégiques franco-allemands, 1954-1996*, Fayard, 1996.

〈Résumé〉

**Réflexions sur le Traité de l'Elysée:
Entre Construction européenne et Réconciliation
franco-allemande**

Yong-Jae LEE

Le 22 janvier 1963, le couple franco-allemand a signé le fameux Traité de l'Elysée. C'est dans la Déclaration commune, précédant le traité, que le général de Gaulle et le chancelier K. Adenauer insistent sur l'idée que le traité représente un acte d'une portée historique essentielle dans la 'réconciliation' des deux peuples 'mettant fin à une rivalité séculaire'. Le Traité prévoit une étroite coopération entre la France et la République fédérale dans le domain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Défense, de l'Education et de la Jeunesse. Largement inspirée de la vision gaulliste des priorités européennes, cette alliance franco-allemande reste politiquement contentieuse.

Le Traité de l'Elysée reste célèbre pour son statut symbolique important de la réconciliation et l'alliance franco-allemandes. Toutefois, il faudrait bien demander quelle importance à accorder au Traité dans l'histoire d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ainsi que dans la construction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Traité de l'Elysée ne scelle pas la réconciliation— c'est un processus qui débute dans les années 1950 — et ne constitue pas un instrument magique pour faire progresser les relations entre Paris et Bonn. Il ne pourrait pas jouer en faveur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Acte bilatéral limité au partenariat franco-allemand, le Traité se met à l'écart de la coopération multilatérale des autres partenaires européens. Dans les années 1960, le couple franco-allemand n'a pas joué un rôle de moteur pour la construction européenne. Le vrai paradoxe réside donc dans le fait qu'un traité moribond, gâché par un départ raté, a été réanimé et su ensuite déployer une force durable.

〈Summary〉

**Reflections on the Elysée Treaty:
Between European Construction and Franco-German
Reconciliation**

Yong-Jae LEE

In 22 January 1963, the franco-german couple signed the Elysée Treaty. In the Common Declaration, preceding the treaty, de Gaulle and Adenauer insist on the fact that it represent an act of historical importance in the 'reconciliation' between two countries, 'putting an end to centuries of rivalry'. The treaty contained a number of agreements for joint cooperation in foreign policy, economic and military integration and exchange of student education. Inspired by the Gaullist vision of European priorities, this franco-german friendship was politically contentious.

The Elysée Treaty still remains an important symbolic assertion of franco-german reconciliation and alliance. One must ask, however, what i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Treaty in the franco-german relations and in the construction of Europe? Far from being a magic box for launch the franco-german relations on their way, the Elysée Treaty did not make the franco-german reconciliation once and for all, the latter dating from 1950s. Moreover, it could not play a role of locomotive in favor of the European Construction. Based on the bilateralism directed by the franco-german partnership, the Treaty stood in the way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of the other european partners. The real paradox reside therefore in the fact that the Treaty, moribund and amputated by its difficult departure, revived well from its early barren times and displayed its vitality.